'60억 코인' 김남국, 韓법무·이준석에 시비

金 "언론에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진실 밝혀보자"
韓 "근거없는 트집… 누가 사라고, 적발 되라고 한 적 있나"
李 "난 알고리즘 트레이딩한 것… 왜 물타기 하시나" 반박

김남국(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불거진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6일 올린 글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한동훈(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맨 오른쪽) 국민의힘 전 대표를 비판해 이목이 집중됐다. 박미나 기자/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 여권을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파상공세가 더해지고 있다. 논란의 불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까지 번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돈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자"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민주당)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는 것"이라며 "다 걸고 이야기하자. 민법상 인정되는 합법적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 재산을 걸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서 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코인을 전량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과 입법권 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정보가 구체적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부풀려 의혹을 제기하고 흠집 내고,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이준석은 화제인 것처럼 띄워 주는 보도를 하고, 김남국은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사실·논리·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 없고, 금융당국에 적발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식이든 코인이든 토큰이든 공개장에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취득하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판매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같이 할 때부터 코인 투자에 대해 관심 많으셨던 것 기억나는데 왜 물타기를 하시냐?"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올 여름도 폭우 예보… 반지하 가구 벌써 '조마조마'

"작년 같은 수해 또 닥칠라"
안전한 동네로 이사 준비

지난해 8월9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쓰레기와 흙탕물을 치우고 있다. 박미나 기자

기상청은 엘니뇨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올 여름 한반도에 많은 비를 예보했다. 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은 올해 우기가 오기 전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논현역 부근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는 A씨(36)는 지난해 강남권 폭우로 침수 수해를 겪은 뒤 올해에는 장마철 전에 침수 피해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반지하 자취방에 물난리를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난리를 겪고 싶지 않아졌다"며 "강남역이나 논현역 근처 중에서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닌 곳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6월 초에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옆집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도 같은 이유로 이미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 등 올 여름 한반도에 많은 강수를 예상한 바 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강남역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B씨(53·여)도 지난해 업장에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을 늘어놨다.

B씨는 "지난해 업장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을 빼고 청소업체를 불러 한바탕 난리였고 뒤처리를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며 "이번에도 폭우가 예상된다는데 같은 일을 겪을까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30대 여성으로 강남역 부근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C씨도 폭우가 예상된다는 소식에 지난해 강남역 침수를 떠올리며 걱정을 앞세웠다.

C씨는 "작년 강남역 침수 당시 집에는 못가고 숙박업소도 너무 고액이거나 만실이 되는 등 갈 곳을 잃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며 "특히 지난해 물이 불어나며 열린 맨홀 구멍으로 사람이 물살에 휩쓸려 빠진 이야기까지 접했던 터라 이번 여름 다시 폭우가 예상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솔직히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장마철 폭우가 예상되면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내 반지하주택 21만 가구 중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약 1만3000가구에 대해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못 본 척 넘어간 노인학대 열에 아홉 '가정 내' 발생

가해자 아들·딸·배우자 최다

〈1면에서 계속〉 탑골공원 인근을 지나던 또 다른 노인 B씨는 "어버이날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매일매일 할 게 없으니 여기 나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라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11시4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며 장기를 구경하던 한 노인은 "자식들 다 바쁜데 밥 달라고 하기는 눈치 보이지 않느냐"며 "나랑 대화하기를 바라는 눈치도 아닌데 혼자 밥 먹더라도 차라리 여기서 먹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소연했다.

가정에서 더 이상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학대 사례 모두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7년에 1만3309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1만93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신고접수로 현장 조사한 이후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도 2017년 4622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6774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학대 관련한 상담도 2017년 8만8919건에서 2021년에는 15만9446건으로 약 2배 증가한 만큼 실질적인 노인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학대 사례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7년 359건에 그쳤던 재학대 사례는 2021년에는 7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8%에서 10.9%로 증가했다.

문제는 가정이 노인들에게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정이 노인 학대 발생 장소였던 경우는 △2017년 4129건(89.3%) △2018년 4616건(89.0%) △2019년 4450건(84.9%) △2020년 5505건(88.0%) △2021년 5962건(88.0%)으로 매년 80% 이상의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에 발생한 재학대 사례 가운데 716건(96.9%)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딸이 34.6%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29.1% △기관 25.8%이 뒤를 이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